

2025년 11월 8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I)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헌 법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15: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사용자는 (나)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한 사람은 (다)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나)	(다)	(라)	(마)
①	3	1	6	500	100
②	3	2	1	1,000	200
③	5	1	6	500	100
④	5	2	1	1,000	200

-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의료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갖게 되는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ㄷ.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통지서의 교부 및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ㄴ.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한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 ㄷ.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동시관리훈련과 관련하여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7.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A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이다. ㉠A종합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A종합병원과 甲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실시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A종합병원이 소재한 B도(道)의 도지사 乙은 동시관리훈련명령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통지서를 A종합병원의 장에게 교부하였다. 이 경우, ㉡A종합병원의 장으로부터 인력훈련통지서를 전달받은 甲은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甲은 국외여행 중이어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어 甲의 부탁을 받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인 의사 丙이 甲을 대신하여 도지사 乙에게 지체없이 甲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였다. ㉣한편, 丙에게 훈련일자가 동일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명령과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동원 및 훈련명령이 동시에 발령되었다면, 丙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우선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사무수행상 불가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원조사 등)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 ③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훈련의 실시)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사무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오늘은 2025년 11월 8일이며, 1985년 12월 8일 출생한 甲은 2018년 3월 1일에 A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에 있고, 乙은 2025년 6월 7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30일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丙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0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었고, 丁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보 기>

- ㄱ. 甲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이지만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 ㄴ. 乙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ㄷ. 丙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ㄹ.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丁은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A시의 시장 甲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하였고, 위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민방위 대원 乙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는 장애’가 남았다.

— <보 기> —

- ㄱ. 甲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ㄴ. 乙의 장애등급은 제4급에 해당하므로, 乙이 지급받게 되는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ㄷ. 乙이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ㄹ.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은 乙이 그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에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① ㄱ(O), ㄴ(O), ㄷ(X), ㄹ(X)
- ② ㄱ(O), ㄴ(X), ㄷ(X), ㄹ(O)
- ③ ㄱ(X), ㄴ(O), ㄷ(O), ㄹ(X)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민방위대의 동원이 명하여진 경우,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루어야 한다.
- ㄷ.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사이렌·타종(打鐘)·경적(警笛)·신호기,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수탁경찰서장에 의한 반상회를 통한 통지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모두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 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단축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며,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월 ()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69

② 71

③ 73

④ 75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나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ㄹ.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 및 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계의 대상과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계	공습관계
ㄱ	일반 옥외등	옥외 다중(多衆) 집합장소등류 중 집회용 광장의 조명등	소등	소등
ㄴ	특수시설 옥내등	공장의 공장장실	소등 또는 차광	소등
ㄷ	특수시설 옥내등	학교 교실·교무실의 등화	소등. 다만, 야간수업 중 또는 열람 중인 경우에는 차광할 수 있음	소등 또는 완전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ㄹ	항공관계 등화	항공기등류 중 착륙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등의 경우에만 일시점등할 수 있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甲에게 민방위 계획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 이하의 징역 또는 (나)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중 개별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피호 등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훼손한 乙에게는 (다)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ㄷ. 민방위 대장 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라) 이하의 징역 또는 (마)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u>(마)</u>
①	6개월	500만원	15만원	2년	2천만원
②	6개월	500만원	25만원	1년	1천만원
③	1년	1천만원	15만원	2년	2천만원
④	1년	1천만원	25만원	1년	1천만원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소집이 해제된 甲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 ②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乙이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예비군에 조직될 수 있다.
- ③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인 丙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 ④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丁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 ②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7,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500명 이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③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비상사태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 ④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20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을 의미한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예비군에 편성한다.
- ②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지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 ④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③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한 경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에는 동원을 연기해야 하며,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육군참모총장은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인사명령서를 전역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④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24. 「예비군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 안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고르면?

-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8 ② 10 ③ 12 ④ 14

문 25.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하여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ㄴ.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ㄷ. 예비군은 적(敵)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ㄹ.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무장을 위하여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26.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ㄴ.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ㄹ.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하여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라) 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연도 2월 말일	1월 31일
②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전년도 12월 31일	2월 말일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해당 연도 2월 말일	1월 31일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2월 말일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도안전관리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인이 된다.
- 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그 위원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와 그 밖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ㄷ.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① ㄱ(X), ㄴ(O), ㄷ(O), ㄹ(X)
- ② ㄱ(O), ㄴ(O), ㄷ(X), ㄹ(X)
- ③ ㄱ(O), ㄴ(X), ㄷ(O), ㄹ(O)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이며, 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부대변인으로 둔다.
- 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으며,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ㄷ.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ㅁ. 안전기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가)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다)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라)(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3년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②	5년	100분의 1	100분의 10	100분의 10
③	3년	100분의 1	100분의 15	100분의 5
④	5년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10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한 후 승인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 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부단장,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 및 구조지원부를 두어야 하며,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는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2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법령 I - 헌법

문 1.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처해졌고 그 노동의 대가까지 잃었던 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② 국민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적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거주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③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 ④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 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③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법치주의와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 ㄷ.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 ㄹ.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은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문 5. 헌법개정 없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국무위원을 25인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을 10인으로 한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20년으로 한다.

문 6.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이나 부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있다.

문 7. 국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 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 문 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가 정당설립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내용적 요건을 구비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소위 ‘허가절차’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헌법 제8조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당등록제도는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의 이념적 목적이나 지향성 등을 이유로 정당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
 - ③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하나,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 문 9. 국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 ② 국회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③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 교통권에는 접견 자체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도 포함된다.
- ②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 ③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문 1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적용되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②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다.
- ④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가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었다가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문 13.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

문 14.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②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③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환자의 나이,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성질 및 경과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조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므로, 사망사고를 낸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④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조항은 이혼의 신중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하고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문 15.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②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재심의 개시결정 없이 위헌제청이 되거나 재심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위헌제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급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